

野 6당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이제 범행 책임 물어야”

정치권·시민단체 尹 거부권 규탄
범야권 비상행동 예고
25일 대규모 장외집회 개최

야권 정당들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에 함께 여는 등 '범야권 비상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며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과거 군사 정권이) 대학생 박종철을 불러다 고문을 해서 죽여놓고도 ‘탁 치니 억 하고 죽더라’고 했던 일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쨌든 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군주민주(君民民主·임금은 백, 백성은 강물이라는 뜻)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국민은 물과 갈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주민주’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이었던 2016년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이기도 하다.

이 대표와 민주당 당선인 및 지지자들은 이날 심야까지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부대변인을 지낸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니 미국에서 배울 점은 배웠으면 좋겠다”며 “미국에서 순직한 군인의 명예훼손을 하면서까지 조직적으로 국가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심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야당에서도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채상병특검법 거부하는 시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라며 “정의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검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회견에서 “다른 나라가 본다면 대한민국은 철권통치를 하는 왕권국가인 줄 알 것”이라며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계속 거부한 게 벌써 10차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해 행정 독재로 가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이승만의 말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60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을 계기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했고, 그해 5월 미국 하와이로 건너가 끝내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오광록 기자·연합뉴스 kroh@kwangju.co.kr



윤석열정권의 21대원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22일 충남 스포츠클러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인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채상병특검법 28일 재표결”

국회의장 퇴임 간담회... “여야 합의 안돼도 표결로 마무리”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50%까지”... 민주 당원권 강화론 확산

국회 앞 난상토론... 이재명 대표, 제도 개혁·소통 조직 신설 고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추미에 국회의장 경선 패배’ 이후 당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날은 당내에서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의 의견을 50%까지 반영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양문석 당선인은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당의 갈 길’ 당원 난상토론에서 “일반 시민 50%, 권리당원 50% 참여로 뽑힌 국회의원 후보가 총선을 통과했다”면서 “그렇다면 원내대표를 뽑을 때도, 우리 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뽑을 때도 똑같이 국회의원 50%, 당원 50% 비율을 적용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은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가는 것 같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당원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의견을 10분의 1 이상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1퍼센트 룰’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런 당원참여 확대 논의가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연임론’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권리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대표는 “당원중심 정당으로 제도를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 같다”며 “이번이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장 경선 후 탈당을 하는 당원들에 대해 ‘소수의 팬덤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근본적인 밑바닥 흐름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당원들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당내 조직 신설 등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일부 당원들이 국회의장 경선에서 승리한 우원식 의원을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거리로 따지면 우원식 후보가 훨씬 더 우리하고 많이 가까이 계셨던 분 아닌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탈표 막아라”...국힘, 본회의 총동원령

부결 당론...반대표 결집 주력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확정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반대표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부결로 당론을 모은 국민의힘은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의 동향이다.

표결 참여가 가능한 여야 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장에서 투표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찬성하는 ‘이탈표’를 17명 이내로 막아야 한다. 현재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유이동·김웅 등 3명이다. 불출마·낙선 의원들 중에서 찬성표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 원내대표는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함께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투표인 만큼, 의원들의 ‘확답’을 받더라도 결코 안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부 본인 소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표결에 앞서 당의 의견이 모이면 존중할 분들”이라며 “이탈표 불안을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탈표가 예상되는 의원들에 대해 본회의 불출석을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표결이 채상병 사건의 진상규명보다는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전략적 성격이 짙다면서 여론전도 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야권에서 ‘대통령 탄핵’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나경원 당선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이 요즘 거침없이 탄핵 발언도 하고 있는데, 그런 야당에 대해서 국민께서 다시 또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